



공무원연금 개악 막아야 국민연금도 강화할 수 있다

▶ 3, 4면을 보시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인정할 수 없다

▶ 관련 기사 4~5면

누구의 말일까요?

미국 국무부: “중국인 1년째 구금한 인권 변호사] 푸즈창이 변호인과 방어 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누리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에 우려한다.”

중국 외교부: “최근 미국 국내 문제[볼티모어 흑인 저항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안다. 미국은 먼저 집안일부터 단속하는데 힘을 집중하길 건의한다.”

이게 바로 '도간개간'

“당신 하나 수사에 협조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입을 잘못 놀리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홍준표 측근인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김해수가

경남기업 전 부사장을 회유하면서 한 말

“[나는] 오는 전화는 다 받는다.”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성완종과

1백40여 차례나 통화한 이유를 해명한답시고

“민주노총에 들어가면 상사에게 반말하는 것부터 가르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간부 교육에서

노조 가입 저지를 지시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 내용 없는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올바른 해결’”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5백94명 성명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 다음날 택시 타기가 싫을 정도다. 택시 기사들이 이슬람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기 때문”

한국에 살고 있는 한 무슬림

“정의의 실현과 ‘법의 지배’를 나침반 삼아 법조인의 항해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겠다.”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은폐 의혹 받는

대법관 박성옥,

군부독재에 충성했던 초심?

현대중공업

정규직·비정규직노조가 함께 사내하청노조 집단 가입 운동을 시작하다

최근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와 사내하청지회가 함께 사내하청지회 집단 가입 운동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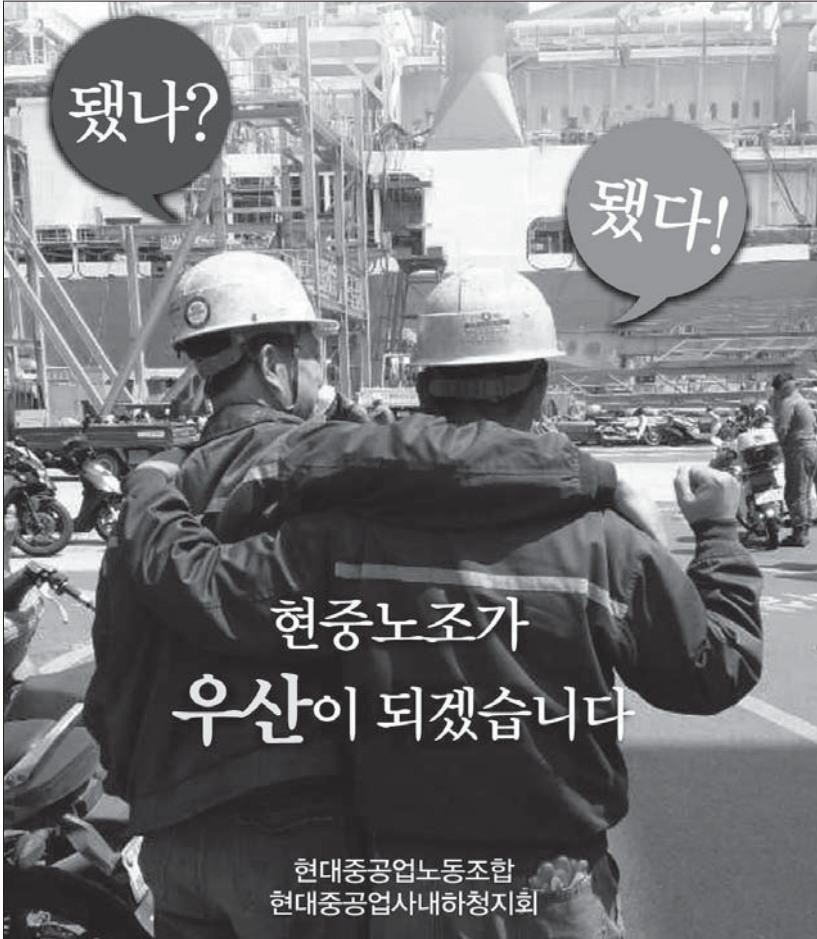
정규직노조 정보 위원장과 사내하청지회 하창민 지회장은 매일 아침 공동 출근 홍보전을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공장 곳곳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리플렛 반포 등을 하며 가입을 호소하고 있다. 5월 14일에는 노조 집단 가입을 위한 원하청 공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60여 개 노동·시민사회·법률·인권 단체가 모여 사측의 탄압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현대중공업·미포조선 하청노동자 노조가입 불법탄압 감시단’을 발족했다.

지난 비정규직 투쟁들을 돌아보면 정규직 노조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2004년 당시 현대중공업의 우파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 열사 투쟁을 휘방 놓았던 것을 떠올려 보면 더 감회가 새롭다.

현대중공업에서 원하청 연대 투쟁의 중요성이 다시금 제기된 것은 지난해 정규직 노조가 18년 만에 파업을 벌이면서부터다. 당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지지해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등 기대를 내비쳤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의 두 배 이상 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이 속에서 최근에는 정규직 노조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조가입 신청서.

민주파 젊은 대의원들이 원하청 연대를 적극 제기했다. 한 대의원은 “원하청이 함께 투쟁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도 함께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평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측이 불안정한 고용을 이용해 악랄하게 탄압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중공

업 사내하청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 78.7퍼센트가 노조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나 75.7퍼센트가 해고와 블랙리스트가 두려워 가입을 못한다고 답했다.

이번에도 사측은 회유와 협박, 유인물 반포 방해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의 기대를 성공적인 대규모 조직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가 사측의 탄압에 맞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확고히 방어하는 게 중요하다.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지회는 집단 조직화, 법적 대응과 더불어, 업체 폐업과 해고, 블랙리스트 등에 맞선 투쟁 계획을 제시하고 조직해 나가야 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조선업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정규직 여성 노동자 1백70여 명이 해고당했고 남은 노동자들도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 받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8천여 명이 잘려 나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6월까지 1만 명이 더 해고될 상황에 놓여 있다. 원청 사측의 기성(하청에 주는 비용) 삭감으로 임금 체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들 모두의 고용을 지키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는 그것을 위한 출발일 것이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원하청 연대 노력을 지속·발전시켜서 사측의 구조조정 공격에도 단결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김지태

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이경훈 지부장과 폭행 가담자들을 징계하라

박설

이경훈 현대차지부 집행부원들이 수천 명이 지켜보는 백주의 집회 연단에서 지역실천단장을 집단 폭행해 놓고도, 반성은커녕 도리어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경훈 집행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고 가증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이 ‘유감’ 표명이란 폭행 행위에 대한 유감이 아니라, 지역실천단장의 발언과 민주노총의 “역지 파업”에 유감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안 그래도 폭력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여긴 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이하 울산 투본)는 5월 7일 회의에서 ‘이경훈 지부장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애초 울산 투본은 폭행 사건에 대한 현대차지부의 공개 사과, 민주노총 투쟁에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결의 표명, 폭행 가해자 징계

등을 이행하라고 이경훈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다. 5월 7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주노총 중집에 이경훈 지부장 등의 징계를 요구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경훈 집행부는 7일 울산 투본 회의에서 ‘민주노총 중집이 열리는 5월 14일 전까지 사과 입장을 내고 규율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경훈 집행부의 ‘사과’, ‘진상조사’ 약속은 시간을 끌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징계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점이 곧 드러났다.

이경훈 집행부는 울산 투본 대표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투본 회의 다음날인 5월 8일 지부 신문에서 현대차지부의 파업 거부를 비판한 사람들을 “역지” 파업을 주창한 “한 줌도 안 되는 관념 덩어리”로 매도했다. 또, 자신을 비판하는 조합원들을 향해 “집행부 흔들기 식의 비판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현대차지부 간부 2명은 4월 30일 지역실천단장이 입원한 병원의

로 찾아가, 수간호사를 고압적으로 닦달하며 ‘허수영(지역실천단장)이 아픈 게 맞냐고 따져 물었다. 최근 울산의 한 보수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담당 의사의 말을 날조하며 ‘아프지도 않은데 억지로 누워 있다’고 음해하기까지 했다.

이경훈 지부장은 지금 ‘임단투가 코앞인데 나를 징계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다. 역경계도 “조합원 중심” 운운하면서 말이다.

적반하장

물론 이런 말은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경훈 지부장이 진정 조합원들의 뜻을 헤아렸다면, 4·24 총파업 불참과 집단 폭행 같은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허수영 지역실천단장이 ‘지부장 자책 없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경훈 지부장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슬러 파업에 불참했기 때문이었다. 울산 투본은 지역실천단장의 발언도 문제가 있다며 공개

사과를 ‘권고’했지만, 지역실천단의 다수 단체들은 이런 권고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경훈 지부장이 진정 조합원들의 뜻을 헤아렸다면, 통상임금 확대, 임금체계 개악 저지 투쟁도 지급처럼 지지부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경훈 지부장은 4월 14일 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협상 결렬과 즉각적 투쟁을 요구한 대의원들의 주장을 묵살하고는 독단으로 협상 지속 방침을 정했다. 형식적인 노동조합 민주주의조차 뭉개 버리고 사측과 타협을 저울질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임단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이경훈 지부장을 그 자리에 그냥 뒀서는 안 된다. 이경훈 지부장은 이미 지난해에도 통상임금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않은 채, 올해 3월 말까지 합의를 연기시켜 주며 그룹 계열사 투쟁 전선을 마비시키는 구실을 했다.

이경훈 지부장이 투쟁의 대의 훼손, 행동 통일 거부, 집단 폭행 사태 등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규탄 목소리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엔 비정규직 노조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 금속노조·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이어 건설노조 조합원 연서명도 발표됐다. 현대차 좌파 활동가들도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 투본은 노동운동의 진정한 규율과 최소한의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경훈 지부장과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발의해야 한다.

민주노총·금속노조 집행부도 이번 사태에 더는 침묵하지 말고 원칙 있게 대처해야 한다. 투쟁의 대의와 원칙, 규율을 훼손한 이들을 그냥 보아넘겨서는 앞으로의 투쟁도 제대로 조직되기 어렵다.

이경훈 지부장은 당장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민주노총·금속노조는 이경훈 지부장과 폭행 가담 집행부원들을 징계하라.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

장호중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주류 양당의 합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자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부담을 격렬히 반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터라 양당의 합의를 못마땅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대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다가 서명한 지 나흘 만에 말을 바꿨다.

합의안 서명 이후 본회의 처리 무산에 이르는 과정이 보여 주듯, 양당은 공무원연금 삭감에는 이견이 없었다. ‘공직 연금’ 관련 부분만 쟁점이었다.

새누리당은 공직 연금 강화 관련 합의문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썼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태도가 완강하자 처음에는 양당 대표 합의문에서, 다음에는 규칙에서 이를 빼는 데 합의해 줬다. 결국 명목소득 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 약속이 빠진 상태로 통과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우파 언론들이 강하게 양당 합의를 비판하고 당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자 김무성은 일단 멈추기로 했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진영은 잠시 투쟁의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그리 긴 시간은 아닐 듯하다. 양당이 곧바로 임시국회를 다시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5월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습 항의 시위를 벌인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여야 야합이다

양당은 이번 합의를 사회적 합의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공식 입장을 통해 ‘야합’이라 규정했듯이 노동자들은 양당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 본회의가 열린 5월 6일에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법안 통과 반대 집회를 열었다.

따라서 정의당과 주요 NGO 리더들이 양당 합의를 ‘사회적 합의’라고 치켜세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 노동자들의 민주적 결정(대의원대회)을 양보안을 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을 무시하고 배신적 합의를 한 사

실을 애써 못 본 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를 인정하려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는 “공무원들의 희생을 담보로 국민연금 강화라는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대한 사회적 합의의 ... 여야 정당과 노동계, 시민사회계의 의지를 모아 합의를 이끌어 낸 역사적 사건”이라고 띄웠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 운영위원장은 “공무원 조직 대표까지

른 틀에서 서명한 합의”라며 이제 “공직 연금 강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토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하향평준화”라고 옹계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말이다.

당혹스럽게도, 민주노총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성명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은 뒤 후자를 취소했다.

국회특위 합의문은 성과가 아니라 개악이다

물론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저항과 민주노총 4월 파업,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성완중 게이트 등 때문에 개악 수위를 약간 낮춰야 했다. 우파 언론들은 이 점을 크게 부각해 ‘거북이’ 개혁이라며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평범한 공무원·교사 노

동자들 처지에서 보면 개악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결과를 봐도 기여금 인상액과 연금 삭감액을 합치면 6천여만 원에서 1억 6천여만 원을 손해 본다. 이 정도면 집 한 채를 뺏기는 수준이다.

소득재분배 조처 때문에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이 늘어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공

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 이런 보도를 이용해 오히려 ‘성과’를 뱉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가련하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01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한 뒤 받게 되는 첫 달 수급액이 지금보다 3만 원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덜 깎인 것이다. 현직 하위 공무원들은 그보다 삭감폭이 더 크다.

공무원연금을 깎아 국민연금을 개선하겠다는 발상의 문제점

공무원연금이 일부 삭감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수 있다면 전체 노동자들에게는 이익이라는 생각이 진보진영 안에 많다.

물론 공직 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 전체에 중요한 일이다.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OECD 권고대로 60~70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명목상으로 40퍼센트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업 기간이 짧아 20퍼센트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사각지대도 넓어 전체 노동자의 절반만 혜택을 받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절감한 재정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전혀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재정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하물며 주류 양당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액의 20퍼센트 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훨씬 큰 규모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 보험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는 그 규모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까닭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좋아할 리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기금 고갈론을 들이대 연금 삭감을 시도하는 마당에 뭘 믿

고 보험료를 더 내느냐는 이들의 항의는 정당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 5백조 원에 이르는 기금을 쌓아 두고는 용돈밖에 안 되는 연금을 지급하는 점, 불공평한 보험료 부담, 정부 지원 사실상 부재 등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기업주들과 정부가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 위기와 국민연금 재정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자본가 계급 전체와 정부에 압력을 넣으려면 강력한 계급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1995년 프랑스 노동자들은 연금과 의료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에 맞서 대규모 파업을 벌였고, 그 결과 기업주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투쟁은 국제적으로도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노동운동의 패배기를 끝냈고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시작된 대안세계화 운동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양당 합의를 두고 벌어진 노동운동·진보운동 내 혼란은 공무원·교사들의 양보를 통한 국민연금 강화 계획(사회연대전략)이 오히려 이런 힘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국민연금 ‘개선’안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덫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해 재정 절감을 하려 했을 뿐, 국민연금 강화에는 애당초 아무 관심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공직 연금 강화는커녕 사적 연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나온 국민연금 보험료 폭탄 협박의 근거 자료도 2013년에 준비했다가 증세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잠시 미뤄둔 개악안에서 사용된 것들이다.

또, 공공 복지를 축소하고 ‘민간’(즉, 재벌들)에 시장을 제공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투자 활성화 대책’,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 등은 공공서비스를 축소해 민간 시장을 확대하거나 아예 민영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박근혜는 이를 위해 규제를 ‘단두대로 보내 없애겠다고 이를 갈고 있다.

이런 정책은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주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또, 재정 지출을 줄여

이들의 세금 부담도 덜어 주려는 시도다.

새누리당이 국민연금을 개선하기라도 할 것처럼 얘기를 흘린 것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공무원연금 개악 양보의 명분을 주려는 꼼수였을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대자본가들은 이런 꼼수가 결국 복지 확대 요구를 부추기는 정치적 효과를 낼까 봐 집요하게 반대한 것이다. 심지어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조선일보〉는 “대통령 거부권 검토를” 요구했고 〈중앙일보〉는 양당 국회의원들에게 지도부의 지침을 거슬러 “이성적으로 판단해 반대표를 던져 주길”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보험료 폭탄 얘기를 흘리며 저항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 낼 때에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운동도 전진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박천석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책임간사

여야와 일부 공무원 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국회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재벌들의 이익을 고려한 박근혜와 우파 언론들이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는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국민연금 상향 합의는 “월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파 언론은 국민연금 상향 합의에 비난을 쏟아붓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도 더 개악하라고 요구했다. ‘하나마나 한 개혁이라며 아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애초 정부의 개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함께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를 계속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런 야합에 동의해 준 적이 없다. 5월 2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공식적으로 개악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더한층 개악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파적 압력으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 이런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는 전교조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를 비롯한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 결국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이 개악안에 서명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따라서 합의를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5월 2일 중집 회의와 뒤이어 열린 5월 4일 중집 회의에서 대다수의 중집 성원들이 이충재 위원장과 김성광 사무처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직권조인을 함으로써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정통을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이자, 양보안을 내지 않는다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항의이자,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연금 삭감에 노조 지도자가 동의해 준 것에 대한 문책이다.

이충재 위원장은 조합원 편지를 통해 “완벽한 저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했다고 변명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대외적 목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이제 “국민연금 강화 투쟁과 인사정책 제도 개선”을 중요 과제로 삼고자 한다.

대의원대회, 중집 회의 등에서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누차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개악 최소화’가 목표였다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원장 스스로 조직적 결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무엇보다 5년 동안 연금이 동결되고 최소 6천여만 원에서 1억 6천여만 원이나

삭감되는 것을 두고 ‘피해의 최소화’를 말하는 위원장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개악안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안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교사 노동자들에게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지금 개시연령 연장과 지급률 인하에 시차를 둔 탓에 노동자들 사이에 격차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지급개시연령 문제가 심각한데, 1996년 이전 입직자 가운데 6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72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됐다. 2010년 이후 신규자부터 생겼던 분열이 더 확대된 것이다.

공무원노조원들의 일부는 개악을 완전히 막기 어려우니 양보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또, 위원장 사퇴 요구가 조직을 분열시킨다고 주장한다. ‘인사정책 개선 기구’에 참여해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투쟁의 힘을 다 발휘한 끝에 불가피하게 타협하는 것과 별로 싸우지도 않고 교섭에 집착하다가 스스로 양보하는 것은 다르다. 파업이 필요하다는 조합원이 67.8퍼센트나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물러서는 것은 불필요한 양보이자 배신적 타협이다. 노동조합이 애당초 싸움 생각이 없다면 정부가 뭐가 무서워 개악을 거둬들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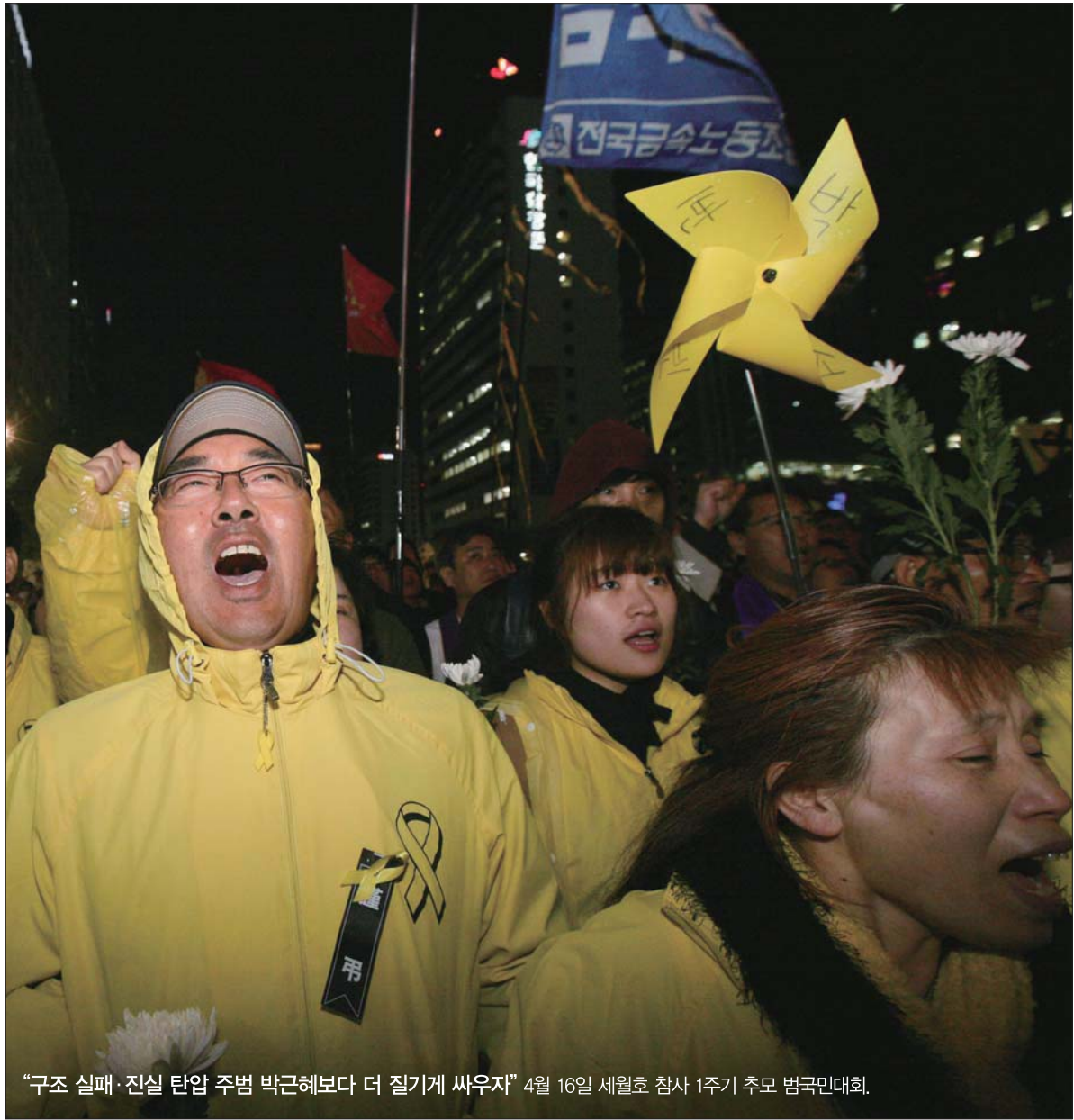
또, 이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직적 결정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직권조인한 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자체가 무기력해질 수 있다.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연금 투쟁은 끝났으니 ‘인사정책 개선 기구’에 참여해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진실과 다르다. 무엇보다 연금 투쟁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공격하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이 완료되면 ‘인사정책 개선 기구’도 유명무실해질 것이 뻔하다. 삼심 출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미 수당 등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는 공공부문 2차 구조조정에 포함된 성과급 확대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고용 불안을 확대할 계획을 밀어붙여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포기한 뒤 더 나은 인사제도와 보수 현실화를 정취한다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더 개악될지도 모른다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현 이충재 지도자로서는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과 좌파는 위원장·사무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공동의 투쟁 기구를 만들며 투쟁적인 지도력을 조합원들에 제공해야 한다.(후자에 무게가 더 실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공무원노조 대대 결정 사항인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실행화할 때다.



"구조 실패, 진실 탄압 주범 박근혜보다 더 질기게 싸우자"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

김종우 기자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의의와 과제

최영준

세월호 참사는 배 침몰뿐 아니라 구조 실패, 진실 은폐, 여야의 무책임한 합의 등으로 대중적 공분이 컸다. 참사와 그 후속 조치를 보면 이윤 체제의 비극, 한국 자본주의의 관성, 부패한 정부 등의 문제를 보어 준다.

자판기에 깔린 친구를 차마 구하지 못하고 빠져나온 한 단원교 학생은 그 친구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평생 남을 상흔이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과적을 했고, 평형수에 문제가 있었고, 경험 없는 조타수의 실수가 원인이었다고만 밝혔다.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당시 기상 악화 때문에 다른 배들은 출항하지 않았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했는가? 왜 세월호만 국정원에 의무 보고를 했는가? 국정원이 실소유주이고 경영자인가? 이런 의혹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 사람

들이 알고 싶은 건 박근혜의 사생활이 아니라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 동안 박근혜가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다. 판교 환풍구 사고, 오토흐 침몰 사고가 벌어졌고 최근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쇠파스에 빠져 숨진 일도 있었다. 그리고 사후 대책도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해 11월 여야 야합으로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이 통과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제대로 사건을 조사·수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런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생겨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권한조차 가로막고 있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퍼나르거나 막말을 하던 자들을 여당 및 특조위원으로 앉히고, 특조위의 조사권(수사권이 아니라)마저 침해하는 “쓰레기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한사코 막으려는 정부가 이른바 ‘안전’ 대책들을 쏟아 냈다. 그러나 정

부가 내놓은 ‘안전대진단과 안전산

업 발전 방안’은 오히려 안전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기술자들이 직접 교육받던 것을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거

나, 유해화학 물질 설치와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안전 문제로 반란됐던 수직 증속 리모컨링을 허용했다.

3월 30일 제출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은 더 황당하다. 안보와 안전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특수기동구조대를 설치해 테러시 테러로부터 구조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산업 활성화 대책’은 안전 관련 업무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안전 펀드’를 구성해서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구조조를 민간업체 ‘엔딘’에게 넘겨버렸는데, 이런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안전사고를 막기는커녕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조처들이다. 2014년 4월 16일을 과거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참사는 과거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쟁점들

처음에는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둘러싸고 진보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추모에 머물러야 하는가, 투쟁을 해야 하는가. 박근혜에게 항의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아닌가 등을 둘러싸고 그랬다. 당시 개혁주의 리더들은 박근혜를 정초준해 투쟁하면 운동이 ‘정치화된다’며 반대했다. 3백 명이 넘는 유가족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지난해 어버이날,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는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다”는 막말을 하자 유가족들이 분노해 KBS 항의 방문을 했다. 그레도 해결이 안 되니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했다. 그날 노숙 농성을 시작한 것이 항의 운동의 시작이었다. 오히려 유가족들이 운동을 ‘정치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5월 10일 안산에 2만 명이 모였고 이후 8월까지 매주 수천~수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해고를 각오하고 박근혜 퇴진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자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다.

일련의 항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투쟁의 중심에 있었다. 조중동과 새누리당은 위선적이게도 ‘순수성’ 운운하며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비난했지만, 이 운동이 정치적으로 발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정부에 항의하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정부 책임자로, 세월호 항의 운동에서 대중적 분노의 상징이고, 무엇보다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 “쓰레기 시행령” 추진을 보면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진실 규명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구조 첫날부터 해경 인력의 5분의 4가 구조가 아니라 유가족들을 감시하는 데 배치됐다. 세월호 참사 항의 시위를 진압하려고 2008년 촛불 투쟁보다 8배나 많은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결국 진실 규명 싸움은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여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 학살은 1980년에 일어났다.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은 15년이 지난 1995년에야 처벌받았다. 정부에 줄기 운동에 결합했다면 박근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조직적 참가를 제안하지 않고 소극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참가하라’, ‘노

책임을 져야 할 핵심 관료들은 요리조리 다 빠지고 ‘피라미’라고 할 수 있는 선원들 — 물론 이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 만 모습을 맞았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이 사회의 정의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열원의 상징이 됐다. 이런 뜻을 모은 것이 커다란 성과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하는 특별법은 이런 열원의 한 상징이었다. 현재도 이런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해 특별법 투쟁에 참가했던 학생들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시행령 폐기 싸움에 나왔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 무책임, 부패가 여실히 드러났다. 사고 당일 오전 청와대는 승객들이 잔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가족대책위가 ‘성역 없는 조사에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안에서 대통령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논쟁이 됐다.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내놓으면 실망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리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정부 책임자로, 세월호 항의 운동에서 대중적 분노의 상징이고, 무엇보다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 “쓰레기 시행령” 추진을 보면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진실 규명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구조 첫날부터 해경 인력의 5분의 4가 구조가 아니라 유가족들을 감시하는 데 배치됐다. 세월호 참사 항의 시위를 진압하려고 2008년 촛불 투쟁보다 8배나 많은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결국 진실 규명 싸움은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여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 학살은 1980년에 일어났다.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은 15년이 지난 1995년에야 처벌받았다. 정부에 줄기 운동에 결합했다면 박근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조직적 참가를 제안하지 않고 소극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참가하라’, ‘노

하고, 시스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회세력인 노동계급이 실제로 움직여야 한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은 박근혜에 대한 증폭된 반감과 불만을 모아내는 구실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투쟁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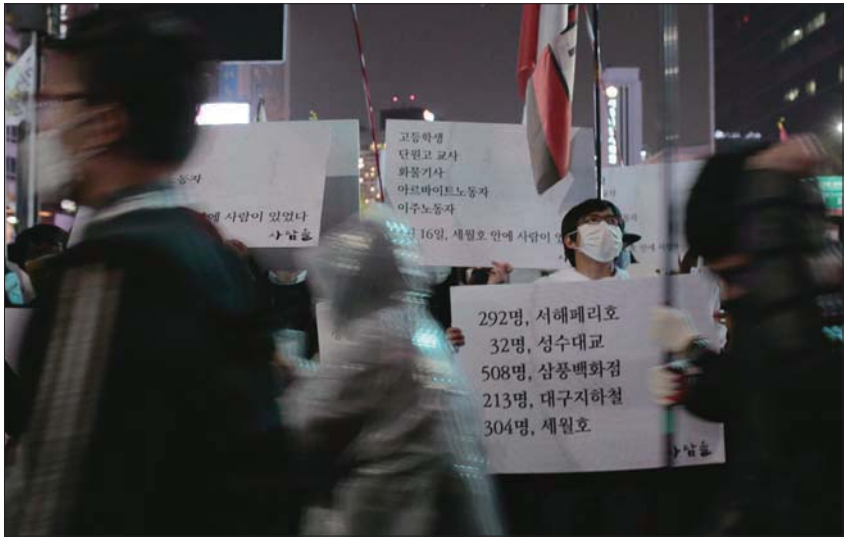
셋째,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은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박근혜를 실질적으로 물러서게 할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 노동자 투쟁의 뒷받침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당시 대책회의의 내 일부 개혁주의 리더들은 대중 운동을 확대하기보다는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기’를 바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새정치연합 박영선이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세월호국민대책회의’가 이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못 하게 해서 논쟁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항의 투표를 했지만, 대안 부재 때문에 새누리당은 참패를 모면했다. 이에 실망한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따며 유가족들에게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한편, 일부 좌파들은 박근혜 퇴진을 물신화했다. 이는 굳이 전체 행진 대열에서 소수가 이탈해 청와대로 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운동이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항의의 몸짓을 더 극적으로 하고자 굳이 소수의 행동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항의 운동이 전진하기 위한 고리는 다른 데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개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로 투쟁을 벌이면서도 세월호 항의 운동도 뒷받침해 준다면 후자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항의 운동에 결합했다면 박근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조직적 참가를 제안하지 않고 소극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참가하라’, ‘노



‘생명보다 이윤’인 체제에서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김종우 기자

동자들이 조개 입고 집회 참석하면 안 된다’는 식이었다.

올해 시행령 폐기 운동은 민주노총의 4·24총파업과 맞물려 벌어진 것은 지난해에 견줘 조금 전진한 부분이다. 지난해 유가족 일부는 민주노총을 부담스러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부터 투쟁을 거머쥔 유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넷째,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은 박근혜의 다른 악행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유가족들의 KBS 항의 방문은 KBS 노동자들을 자극했다. KBS 노동자들은 박근혜의 낙하산 사장 김환영 사퇴를 요구하며 파업해 승리를 거뒀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면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파업을 했고, 의료 노동들과 정책들을 부분적으로 늦췄다. 일부 노동운동가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으로 자신들의 투쟁이 문헌다는 협소한 부문주의적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 동반 상승 작용을 하기도 한다.

다행히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놀라운 단결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정부

는 끊임없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과거 경험에서 배워 훨씬 더 뭉쳐 있다. 또, 유가족들은 ‘우리끼리 하기는 어려운 싸움’이라며 ‘4·16연대’라는 진상 규명 기구를 설립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4·16 연대’는 유가족과 사회단체가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이다.

이 싸움은 단지 1~2년의 싸움이 아니다. 아직 진실 규명을 향해 한 발자국도 안 나아갔다. 앞으로 정부 기관들이 특조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분열 시도에 맞서야
마지막으로 유가족,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 사이의 단결이 강해졌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5백2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일 옥상이 무너져 내리고 기둥에 금이 가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도 사측은 영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 백화점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자신들만 먼저 대피했다. 그 당시에도 정경유착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백화점 사주 1명만

제 와서 그 시행령 하의 특조위를 진상 규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다.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국가의 강제력이 필요하다. 특조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활동하면 이를 통해서도 진상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폭로될 것이다.

따라서 양 편향이 아니라, 한편으로 는 국가를 상대로 한 진상 규명 요구를 계속하면서, 그와 더불어 특조위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재개정까지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이 싸움이 안전 사회에 대한

구속되고,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유가족들의 친

인척까지 불러내서 “빨리 돈 받고 처리하자”, ‘지급 못 받으면 앞으로 못 받는 다’며 회유하고, 유가족들을 분열시켰다. 결국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 한 사례는 2003년에 일어난 대구지하철 참사다. 지하철 1인승무제와 인력 감축으로 역사 안에 사고에 대처할 노동자들이 없었다는 점이 피해가 확대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사고 이후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 유가족들이 안전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지하철노조는 파업까지 벌이며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좌측을 인화성이 적은 물질로 바꾸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더 철저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유가족들이 배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한 것이 한 요인이었다. 정부가 계속 분열을 획책하는 이유다.

다행히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놀라운 단결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끊임없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과거 경험에서 배워 훨씬 더 뭉쳐 있다. 또, 유가족들은 ‘우리끼리 하기는 어려운 싸움’이라며 ‘4·16연대’라는 진상 규명 기구를 설립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4·16 연대’는 유가족과 사회단체가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이다.

이 싸움은 단지 1~2년의 싸움이 아니다. 아직 진실 규명을 향해 한 발자국도 안 나아갔다. 앞으로 정부 기관들이 특조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분열 시도에 맞서야
마지막으로 유가족,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 사이의 단결이 강해졌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5백2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일 옥상이 무너져 내리고 기둥에 금이 가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도 사측은 영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 백화점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자신들만 먼저 대피했다. 그 당시에도 정경유착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백화점 사주 1명만

제 와서 그 시행령 하의 특조위를 진상 규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다.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국가의 강제력이 필요하다. 특조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활동하면 이를 통해서도 진상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폭로될 것이다.

따라서 양 편향이 아니라, 한편으로 는 국가를 상대로 한 진상 규명 요구를 계속하면서, 그와 더불어 특조위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재개정까지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이 싸움이 안전 사회에 대한

구속되고,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유가족들의 친

인척까지 불러내서 “빨리 돈 받고 처리하자”, ‘지급 못 받으면 앞으로 못 받는 다’며 회유하고, 유가족들을 분열시켰다. 결국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 한 사례는 2003년에 일어난 대구지하철 참사다. 지하철 1인승무제와 인력 감축으로 역사 안에 사고에 대처할 노동자들이 없었다는 점이 피해가 확대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사고 이후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 유가족들이 안전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지하철노조는 파업까지 벌이며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좌측을 인화성이 적은 물질로 바꾸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더 철저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유가족들이 배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한 것이 한 요인이었다. 정부가 계속 분열을 획책하는 이유다.

다행히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놀라운 단결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끊임없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과거 경험에서 배워 훨씬 더 뭉쳐 있다. 또, 유가족들은 ‘우리끼리 하기는 어려운 싸움’이라며 ‘4·16연대’라는 진상 규명 기구를 설립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4·16 연대’는 유가족과 사회단체가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이다.

이 싸움은 단지 1~2년의 싸움이 아니다. 아직 진실 규명을 향해 한 발자국도 안 나아갔다. 앞으로 정부 기관들이 특조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분열 시도에 맞서야
마지막으로 유가족,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 사이의 단결이 강해졌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5백2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일 옥상이 무너져 내리고 기둥에 금이 가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도 사측은 영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 백화점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자신들만 먼저 대피했다. 그 당시에도 정경유착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백화점 사주 1명만

제 와서 그 시행령 하의 특조위를 진상 규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다.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국가의 강제력이 필요하다. 특조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활동하면 이를 통해서도 진상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폭로될 것이다.

따라서 양 편향이 아니라, 한편으로 는 국가를 상대로 한 진상 규명 요구를 계속하면서, 그와 더불어 특조위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재개정까지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이 싸움이 안전 사회에 대한



사진 출처: Jesús Calonge (블라카)

2015년 1월 31일 포데모스 주최의 건축 반대 시위.

포데모스가 직면한 도전

스페인에서 일련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양당 체제가 붕괴하고 있다. 스페인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엔루차(‘투쟁 속에서’라는 뜻)의 회원 앤디 더건이 급진적인 신당 포데모스의 발전과 한계를 분석한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

앞으로 몇 달은 스페인 정치의 향방에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 5월 24일에 지방선거가 있고, 9월 27일에는 카탈루냐의 독립을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아마 11월에는 총선이 있을 것이다.

여러 해 동안 계속된 대규모 거리 항의 운동과 만연한 부패 때문에 30년 이상 스페인 정치를 주름 잡았던 양당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이 와중에 이런 선거들이 치러진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둘이 합쳐 80퍼센트 정도를 득표해 왔던 보수 정당 국민당(PP)과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회당(PSOE)이 종래의 절반밖에 득표하지 못할 듯하다.

이 양대 주류 정당은 두 개의 신당한테서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다섯 석을 얻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둔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에 이어, 최근 “우파 판 포데모스”라는 시민당(시우다다노스)도 등장했다. 시민당은 기존의 정치 구도를 고수하려는 정치 지배층의 절박함이 낳은 산물인 반면, 포데모스는 국가를 근본에서 민주적으로 변모시키고 건축을 끝내겠다고 천명한다.

기존 정치세력들의 견제

포데모스의 입지가 단단해지기 전에 그 돌풍을 잠재우고 올해 내내 영향을 미칠 전례를 만들려고 사회당은 3월 22일 안달루시아 주에서 조기 지방선거를 실시했다. 안달루시아 주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사회당이 통치해 온 지역이다. 사회당은 의석수는 유지했지만 (47석), 전통적 표밭이던 이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결과를 얻었다.

포데모스는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 때보다 득표를 갑절로 늘려 15석을 얻었다. 투표 전에 포데모스가 주최한 마지막 선거 유세에는 1만 6천5백여 명이 참가했는데, 다른 주요 정당들의 선거 유세 참가자는 모두 합해도 겨우 1만여 명밖에 안 됐다. 포데모스에 투표한 사람들은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청년들, 그 전에는 투표하지 않거나 사회당 또는

좌파연합(IU, 공산당이 주도한다)에 투표하던 사람들이다. 기존의 지지층을 유지하는 정당은 급진좌파인 민중연합후보(CUP)와 바스크국가연합(Bildu)뿐이다. 두 정당은 각각 카탈루냐 주와 바스크 주에 지지 기반이 있다. 여기에는 민족 자결에 대한 포데모스의 입장이 모호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잠식

3월 22일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포데모스가 얻은 표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드리드 주나 발렌시아 주 같은 핵심 지역에서는 많이 득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데모스가 제1당이 될 수 있다는 기대(포데모스 지도부가 교묘하게 조장한) 때문에 IU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득표만 줄어든 것이 아

니라, 활동가와 간부들이 포데모스로 옮겨갔다. 안달루시아에서 IU는 기존의 12석 중 7석을 잃었는데, 이는 공공부문 지출을 감축한 사회당의 안달루시아 주정부에 연정 파트너로 참가했기 때문이다.

국민당의 안달루시아 선거 결과도 매우 나빴다. 의석이 50석에서 33석으로 줄었다. 주로 시민당에게 50만 표 가까이 빼앗겼다. 덕분에 시민당은 9석을 얻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시민당은 카탈루냐 주에만 기반이 있었다.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카탈루냐 민족주의에 반대하며 사회당의 표를 잠식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반부패 기조, 모호한 정치, 후보들이 보통 신인들인 점 등 덕분에 시민당은 [안달루시아 주에서] 국민당뿐 아니라 포데모스의 지지자도 잠식하고 있다.



사진 출처: Cyberfranco (블라카)

포데모스 사무총장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포데모스 지도부의 전략

건축에 반대하고, 조직 구조가 혁신적이고, 집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포데모스는 그리스 좌파 정당 시리자와 종종 비교된다. 그러나 시리자가 기존 정치조직을 기반으로 한 정당인 반면, 포데모스는 완전한 신생 정당이다. 포데모스는 인디그나도스(분노한 사람들) 운동의 유명한 구호, “아무도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로 상징되는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건축에 반대하고 대책없이 부패한 정치 체제에 항의해 인디그나도스 운동은 2011년 광장 수백 곳을 점거했다. 그러나 이 운동만으로는 대량 실업, 빈곤, 복지 파탄을 끝낼 수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데모스를 그 해결책으로 여겼다. 따라서 포데모스 지도부는 불

신받고 있는 현 정치 체제(1970년대 후반 프랑코 독재 종식 이후 들어선)를 전복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고 어쩌면 유일한 전략)이라고 본다.

주로 젊은 대학강사들이인 포데모스 지도자들은 애초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포퓰리즘 정부들에서 영감을 얻었다. 급진민주주의 투쟁이 계급투쟁을 대체한다고 주장하는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같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영향으로 포데모스 지도자들은 이제 핵심적 정치 분단선이 좌 · 우가 아니라 “민중”과 부패한 정치 · 경제 엘리트들 사이에 그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 속에서는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표현하는 지도자의 구실이 핵심이다. 그래

서 지금은 포데모스 사무총장이 된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의식적으로 TV 토론을 통해 지지를 얻는 구상을 세웠다. 풍부한 사례와 통계로 무장한 이글레시아스의 명료한 정치적 메시지는 [경제] 위기에 고통받고 정치적 기득권에서 배제된 수많은 스페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사회당 · 국민당 · 시민당 · 포데모스의 지지율은 비슷하다. 그러나 여론은 매우 유동적이다. 여전히 포데모스는 향후 몇 달 안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다. 만일 포데모스의 지지율이 실제로 하락했다면 그것은 시민당에 잠재적인 지지자들을 뺏기고, 언론이 포데모스를 물어뜯고, 당내 갈등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포데모스 지도부와 좌파 사이의 논쟁

포데모스는 당 중앙 및 지역 지도부, 공직 후보 선출 때 온라인 투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 때문에 많은 활동가들이 찬밥 신세가 됐다. 이글레시아스의 대중적 인기 때문에 그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직 선거에서 대체로 압도적 득표로 선출된다. 마드리드에서는 (대체로 지도부보다 더 좌파적인) 지역 서클의 참여 없이 후보자들이 정해졌다. 당내 다원주의 부족과 투표라는 수단에 대한 강박적 강조가 결합된 결과, 많은 서클들이 약화됐고 활동가가 줄었으며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

이글레시아스와 그의 측근들은 당내 좌파들에게 충고하기를, 패배를 부르는 교조주의를 버리라고 한다. 목표는 이기는 것이라면서 말이다. 현재 온라인에 등록된 지지자가 30만 명을 넘는 등 엄청난 기세로 성장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듯하자 포데모스는 전보다 온건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경제 핵심 부문의 국유화, 60세로 정년 감축, 모든 시민들에 기본 소득 보장, 부채 탕감이 공약에서 사라졌다.

이글레시아스와 그의 측근들은 양당 체제가 붕괴하면서 스페인을 위로부터 민주적으로 혁신할 “기회가 열렸다”고 본다. 그래서 포데모스는 “중원을 장악해야” 한다며 국민 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온건한] 개혁과 사회 정의를 강령으로 주장하며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주장한다. 포데모스의 새 경제 계획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식 볼리바르주의 운동보다는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더 효율적인 조세제도 확립, 유럽연합 기관들과의 부채 재협상, 정치 파벌과 특혜 근절

같은 조치들은 긴축이 불러온 폐해 중 가장 나쁜 측면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이글레시아스와 측근들은] 이런 개혁 조치들이 “애국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글레시아스는 이런 류의 애국주의가 필요하다고 종종 말한다. “[나의] 조국은 깃발도 건물도 아니요, 국민이다” 하고 선언하면서 말이다.

급진좌파들은 펠리페 곤살레스 하의 사회당이 광범한 개혁을 약속하며 1982년에 정권을 잡았던 것을 포데모스가 답습한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이글레시아스는 공개적으로 그렇다고 말한다. 당시 사회당 정부가 프랑코 독재 종식 이후 전환기의 희망을 배신했는데도 말이다. 포데모스가 이를 자처하는 것은 사회당의 표를 뺏어오려는 치밀한 계산 때문이다. 포데모스는 야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오래지 않아 다른 정당들과 손을 잡을지를 두고 포데모스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스 상황을 보면, 시리자의 매우 온건한 개혁 의지도 얼마나 빨리 동결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시리자처럼 포데모스도 유럽연합 탈퇴는 물론이고 유로존 탈퇴도 분명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개혁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된다. 포데모스가 정치적 메시지를 온건하게 바꾸고, 시민당과 겹치는 지지층을 겨냥해 중도화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층을 많이 잃을 위험이 있다. 긴축에 반대하고 부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해야 포데모스가 다른 정당들보다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5월 27일 바르셀로나 인디그나도스 운동.

사진 출처: Fotomovimiento (텔레카)

혁명가들은 포데모스를 왼쪽으로 당겨야 한다

특유의 이데올로기적 구성 때문에, 포데모스가 “권좌에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코 미리 단정할 수 없다.(역사적 사례를 보면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다.) 대기업에 “애국심”을 호소하는 것은(이글레시아스는 “우리는 부자들이 필요하지만 그 부자들에게 좀 더 협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책없이 순진한 것일 수도 있고, 포데모스의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런 호소에 담긴 함의는, 부자들이 세금을 낸다거나 하는 “애국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더 급진적 조치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데모스는 결국에는 배신하고야 말 사회민주주의의 재탕이야’ 하며 일축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일 것이다. 이 정당의 뿌리가 인디그나도스 운동이므로, 당 활동가와 지지자 다수가 2011년 광장 점거 운동에서 나타난 급진민주주의와 긴축 반대 정치를 공유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포데모스가 중요한 변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포데모스 안에는 더 급진적인 정책을 제한하고 서클이 당을 더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산발적인 반대 여론이 있다. 소수이지만 반자본주의 좌파(사실상 엔루차와 아래 설명될 IA를 가리킴)도 여전히 서클과 일부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다.

이런 항의 여론은 보통 제4인터내셔널 경향의 반자본주의좌파(IA)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돼 왔다. IA는 포데모스 창립에 크게 기여했다. 불행히도 최근 많은 활동가들이 IA에의 문을 품게 됐다. 포데모스의 안탈루시아 지역 지도부 선출을 놓고 IA 회원이자 유럽의회 의원 테레사 로드리게스가 이글레시아스와 맺은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IA가 그 지역의 IA 회원을 절반 가까이 제명했기 때문이다.

로드리게스는 전에는 다른 IA 회원들처럼, 이글레시아스가 상의하달식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비판했었다. 이런 후퇴에도 불구하고 반자본주의자와 활동가들은 포데모스 안에서 계속 투쟁해야 한다. 기층 당원과 선출된 대표자들은 개혁 시도를 지지하고 포데모스를 좌경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5년 5월호 / 번역 김준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시리자가 결단을 내릴 때가 다가오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시리자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대결에서 결단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논평이 많다. 그리스는 5월 12일까지 7억 7천만 유로를 국제통화기금(IMF)에 갚아야 한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빚도 제때 갚고 신자유주의 ‘개혁’도 시행하라는 채권자들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일 것인가?

노동부 장관 파노스 스쿠르레티스는 IMF가 “매우 완고하게 연금 삭감, 대량 해고, 최저임금 인상 불가 등의 노동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자 정부가 보내는 신호는 모순된다. 그리스 협상단 대표가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에서 외무부 차관 유클리드 차칼로토스로 교체된 것은, 치프라스가 [유럽연합과] 합의할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다른 한편, 치프라스는 4월 28일 이렇게 말했다. “채권단의 요구 수준이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다면 [국민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치프라스가 결국 타협하면 좌파 의견그룹 레프트 플랫폼이 긴축에 반대해 뛰쳐나오면서 시리자는 분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나는 이런 예측에 대해 회의적이다.

역사를 보면, 좌파 정부가 자본에 굴복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할 때 그 안의 좌파는 저항하지 않았다. 1975년 여름 영국 노동당 정부의 총리 해럴드 윌슨이 [노동당 좌파] 토니 벤을 경질하고 임금 억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토니 벤은 저항하지 않았다. 1983년 프랑스에서 사회당 소속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당시 산업부 장관] 장-피에르 슈벤망은 사임했다가 곧 내각에 복귀했다.

4월 29일 시리자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키프로스의 니코시아에서 치프라스는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 남키프로스 대통령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와 3자 정상회담을 하고 악수하며 사진을 찍었다.

〈미들리스트 아이〉는 그들이 발표한 공동 선언문을 다음 같이 보도했다. “국제 테러리즘이라는 골칫거리가 사헬 지역과 사하라 이남 지역 뿐 아니라 이제는 유럽, 걸프만, 중동, 북아프리카를 위협하고 있다. … 3국은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를 물리치고, 사실상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지중해 동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하기로 뜻을 모은다.

“이라크군이 아이시시 반대 국제 동맹의 지지 에 힘입어 최근 전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고무됐다.”

놀라운 소식이다. [2001년] 9·11 공격 이후 유럽 전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 주요 축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 사회포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사회포럼은 좌파의 단결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칭찬받았는데, 바로 이 기구에서 현재의 시리자가 생겨났다.

‘테러와의 전쟁’

2011년 1월 25일 이집트 혁명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고,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 점거 운동을 본뜬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났다. 그 가장 중요한 사례 하나는 바로 2011년 여름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 등 그리스 전역의 광장들을 점거한 운동이었다. 시리자는 이 운동에 큰 힘을 실었었다.

그래서 치프라스가 이집트에서 반혁명을 일으킨 도살자 엘시시와 악수하고, 최신 버전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은 큰 충격이다.

그리스·이집트·남키프로스 정상회담은 지중해 동부의 해저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근 국가들의 경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스·남키프로스·이스라엘이 터키와 각을 세우는 일은 그 지역에서는 익숙하다. 〈인디펜던트〉의 발칸반도 통신사는 남키프로스 정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그리스, [남]키프로스, 이스라엘의 3자 정상회담이 계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전개는 치프라스가 우파 정당인 그리스독립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것이 단지 의회 다수파를 차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스독립당과 마찬가지로 치프라스도 지중해 동부에서 그리스 자본주의의 이해관계를 천명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리스·남키프로스·이스라엘의 정상회담은 치프라스·유럽연합 협상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치프라스는 유럽 지배자들에게 지중해에 대한 기존 제국주의 질서를 지키려면 자기에게 기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긴축을 끝내려면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52호 / 번역 차승일



4월 28일 그리스·키프로스·이집트 정상회담에서 이집트 반혁명의 수장 압델 파타 엘시시(왼쪽)와 악수하는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오른쪽).

사진 출처: 기프리스 뉴스



본격화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

청년 고용 빌미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한다

이정원

5월 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5월 중에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과 민영화 방안인 ‘기능 조정’ 세부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공격을 공공기관에서 선도해 이달 중 민간부문에서도 가이드라인 등으로 강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2016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깎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향후 2년간 8천여 명을 신규채용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경영 평가로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임금 일자리를 독점해 신규채용이 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임금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예컨대, 공공기관 노동자 중 35.7퍼센트가 3백 인 이상 민간기업보다 임금이 낮다.

무엇보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사업·투자가 늘어 총 지출액이 대폭 증가한 와중에도 인력 총원은 억제돼 왔다. 그래서 2007~11년 공공기관 지출 총액 중 인건비 비중은 5.2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계속 줄었다.

기껏해야 정부가 늘린 것은 비정규직 저질 일자리였다. 2008~14년 동안 공공기관 2백95곳에서 비정규직은



부모의 임금 깎아 자녀의 일자리를 주라고? 청년실업은 정부와 기업이 책임이라고 요구한 청년·학생 기자회견, 2015년 3월 31일.

20.4퍼센트, 무기계약직은 무려 4백 3.8퍼센트가 증가한 데 반해 정규직은 7.8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정부가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를 부각하면서 이간질하는 것은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의도에서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려고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시간제 일자리도 대폭 늘리려는 계획이다.

이런 정부가 청년 고용을 걱정하는

양 말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지금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부의 공격에 반대해,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 개선 등을 통한 노동조건 상향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와 같은 성과 중심 운영 체계를 강요하는 것은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길이라고 비판하고, 민영화 중단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요구한다.

공공기관 노조가 이런 요구를 내걸고

앞장서 싸우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는 수많은 비정규직·청년들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양보론

그런데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처우 개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양보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은 우려된다. 노동자들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일정하게 희생할 의사

를 밝히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해 “일방적” 공격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4월 말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는 정부가 일체의 양보 의사가 없어 결국 빈 손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런 양보는 오히려 정부의 공격에 제동을 걸 투쟁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자들이 하나를 양보하면 정부는기가 살아 더 내놓으라고 달려들 것이고, 우리 쪽은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철밥통” 비난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투쟁에 단호히 나설 수 있어야, 공공서비스 강화나 비정규직 격차 해소와 같은 투쟁에 나설 자신감도 더 커질 수 있다.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은 질 좋고 안전한 공공서비스와 뿔 수 없는 관계이므로, 노동조건을 지키려 하는 것은 결코 편협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이때 공공운수노조는 “진정성” 있는 노정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할 것이 아니라, 투쟁 건설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부터 정부의 공격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하면서, 예정한 6월 총력 투쟁으로 힘 있게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개별 공공기관 노조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며 개별 교섭에서 양보해 각개격파 되지 않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원칙 있게 반대하며 싸우도록 결집시킬 수 있다.

철도노조

승진 경쟁 부추길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은 부결돼야 한다

이정원

4월 30일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가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는 단협 잠정합의(안)을 내놔다. 5월10~1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뿐 아니라 올 3월 대의원대회 결정을 저버린 비민주적 처사다.

노동자들은 근속승진제가 폐지되면 공사 측이 개인별 성과 평가 권한을 휘두르며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근속승진제는 사측의 전횡과 통제로 고통받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민주화하면서 쟁취한 소중한 성과였다. 그런데 김영훈 집행부는 근속승진제를 지키려는 투쟁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폐지 합의를 해 줬다.

게다가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

(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승진이 사측의 심사에 따라 이뤄지고, 승진 적체도 심각해진다. 하위 직급 노동자일수록 피해가 크게 설계돼 있어 노동자 내 갈등과 반목을 낳을 수 있다.

또, 근속승진제를 폐지하고 그 대가로 삭감된 인건비를 원상 회복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조만간 시작될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의 추진 과정에서 인건비 삭감이 또다시 노조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결 호소 확대

지금 조합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매우 크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를 시작으로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자는 호소가 확대되고 있다. 지부 성명, 차량지부장들의 성명, 개인 성명 등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철도노조 집행부 내에서도

사무처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이 합의에 반대해 사퇴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 도입에 철저히 대비”하려면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근속승진제 폐지를 수용해 단협을 체결하면 “적어도 단협 기간 내에는 제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와 사측의 추가적 단협 개악 압박을 막기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 추진 때를 기억해야 한다. 당시 철도공사는 단협 시한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노조에 단협 개악 합의를 강요했다.

무엇보다 김영훈 집행부는 근속승진제 사수 투쟁이 ‘철밥통’ 공격에 노출되기 십상이어서 여차피 이길 수 없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양보해야 ‘사회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 등도 일관되게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키는 일은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투쟁이 아니다. 노동조건 방어와 공공서비스 강화를 함께 요구하며 투쟁한다면 철도 민영화 파업 당시와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수세적 태도는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려, 정부의 민영화 같은 공격에 맞서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힘에 의존할 때만 정부와 공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2단계 ‘정상화’ 공격 -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민영화 - 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조건과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길이자,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 약화를 막는 데 이바지하는 길이다.

근속승진제 폐지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지역과 직종을 넘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지역 간, 직종 간 불균등성을 줄이고 부결 운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트워크로 연결된 활동가들은 서로 전방을 공유하면서, 노조 각급 단위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각종 모임과 회의를 열고 근속승진제 사수 의지를 모아 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잠정합의(안) 부결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이후 투쟁대안도 구축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이후 투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봐야 부결 선동에 자신 있게 화답할 것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 실린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투쟁 태세를 갖추자’를 보시오.